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전주시의회, 해양 투기 규탄·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동)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다”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수산업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의회는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위반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 중인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각 정당과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반복되는 재해는 ‘인재’ 다”

송영진 전주시의원, 반복되는 침수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은 마산천 일원, 화전동 침수 피해 대책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포럼’을 통해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반복되는 침수 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예방적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상습 침수가 진행되는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재난 매뉴얼을 재검토 및 상습 침수지역 대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따라서 기상 이번 비상화에 대응해 재난 대응 체계를 재검토하고,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제언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김제시 등과 협력해 마산배수장을 증설하고, 상습 침수피해구역 배수 개선이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국농어촌공사는 우수방관하고 있다. 마산배수장이 김제시 소관이지만,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두 번째 화전동 침수 피해의 경우 스마트배수시스템이 지난 6월에 고장이 나서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수동으로라도 수문을 닫아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다고 한다. 결국, 침수가 시작된 후에야 수문을 닫았고, 그것이 침수의 중요한 원인이란 농민들은 주장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상습 침수가 진행되는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재난 매뉴얼을 재검토 및 상습 침수지역 대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따라서 기상 이번 비상화에 대응해 재난 대응 체계를 재검토하고,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제언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김제시 등과 협력해 마산배수장을 증설하고, 상습 침수피해구역 배수 개선이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제11차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 총회’ 전주서 개최

회원도시 23개국 350여명 참가 15일까지 진행... 전주 선언문 발표·관광산업 발전 방안 논의

전주시는 지난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4일간 라한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제11차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 총회’를 개최한다. ‘관광이 곧 경제다. 관광산업이 이끄러가는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11차 TPO총회는 137개 도시정부 대표와 57개 민간단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시장급 특별회의, 주제별 회의, 전체회의 등 공식행사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다. TPO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도시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첫날 개막식은 박형준 부시장(회장도시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회사, 신현국 문경시장·우경하 TPO 사무총장의 환영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이연택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

과 마리오 하디 전(前)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CEO가 맡았다. 회원도시 대표들은 이어 시장 특별 회의와 양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된 주제별 회의 등을 통해 TPO 운영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TPO의 세계화 △관광산업 발전 방안 △회원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회원도시들은 둘째 날 전체회의를 통해 회원도시간 협력 증진 네트워크 강화 및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회원도시 역점사업

지원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전주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전주다운 오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로 여기겠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도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카카오모빌리티·전주시설공단,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협력

전주시가 (주)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위치정보와 여유 공간 확인 요건 결제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다. 시는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목표로 13일 (주)카카오모빌리티, 전주시설공단과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및 주차 가능 노면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신정은 카카모빌리티 이사 송민수 전주시설공단 부부장(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한 이후,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시스템 구축과 SW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주)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한옥마을 제



전주시는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목표로 13일 (주)카카오모빌리티, 전주시설공단과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및 주차 가능 노면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주차장을 시작으로 주차가능 노면 등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전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보화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의 정보가 제공돼 효율을 향상시키고,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 시간 감소와 주차 대기 행렬로 인한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전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7분 13만 7633건, 총 5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4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시가격액 비율이 하향조정되어 주택세 재산세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588-23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전북은행),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및 금융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납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김옥기기자

전주·익산 도서관여행 메타버스 구축 착수

책의 도시 전주와 익산의 도서관을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여행이 가능해진다. 시는 1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익산 도서관여행 메타버스 구축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시와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한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5억 9200만 원을 투입해 특화도서관을 연계한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책기둥도서관, 익산 생태유

전도서관과 금마한옥도서관 등 양 도시의 특화도서관을 연계해 흥미와 실사 중심의 메타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착수보고회에 참석자들은 전주·익산 도서관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청취하고, 세부 구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익산 도서관여행 메타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